

쿠팡 노조 “택배 없는 날도 못 쉬어…휴게권 보장하라”

“택배 없는 날”인데 쿠팡만 피약별에 일해 “기계·돼지보다 못하냐…폭염 대책 마련하라” 쿠팡 “휴게시간 보장·원하는 날 쉴 수 있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4일 “쿠팡은 ‘폭염 대책’을 노동자들에게 ‘로켓 배송’하랴”며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은 쿠팡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오후 2시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쉬고 있을 때 쿠팡 노동자들은 피약별에서 배달 중”이라며 “사람답게 일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쿠팡의 지난 2/4분기 영업이익이 1940억, 총 매출액은 7조6900억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하나 뇌졸중 생각을 하지 않고 쥐어짜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민 지부장은 이어 “노사정 합의로 이끌어낸 ‘택배 없는 날’에도 쿠팡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물류업체 전면에 자기들이 서서, 독점업체가 되겠다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며 지난 2020년부터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다. 그러나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이에 불참하고 있다.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 등 혹서기 수평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온이 37, 38도가 되면 기차도 서행하고, 기계도 운행을 멈춘다”며 “인간이 이 무더위에 9시간씩 일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해선 안 된다. 노동자의 건강

과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했다. 이창을 쿠팡지부 대구 분회장은 “돼지농장에서도 에어컨을 돌리는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돼지보다 못하단 말이냐”고 호소했다. 그는 “센터에 유일하게 있는 냉풍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땀으로 젖은 몸을 뜨거운 바람에 식히며 일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폭염이 지나면 물량이 풀리는 추석이 오고, 추석 후에는 흑한기와 설날이 다가온다”며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경영진은 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매년 국회에 찾아온 노동자들을 보고 저희부터 엄지엄음을 느껴야 한다”며 “국회에 들어가 저부터 소리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김범석 쿠팡 의장의 이름이 쓰여진 나무판에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쿠팡 측은 “정기적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



여하고 있다”며 “각종 냉방·환기 장치 운영 및 보냉 물품 지급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각적 조치와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택배 없는 날’과 관련해서도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며 “쿠팡친구(쿠친)은 연중 130일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나기자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공매김판에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문구가 게시돼 있다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를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죄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

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유재수 검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검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유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